

## Juliet Schor와 Gary Cross의 '시간과 돈'의 테제를 중심으로\*

Choice of Time and Money as the Fruit of Productivity Gains in Korea:  
Using Juliet Schor & Gary Cross' Time and Money Thesis

심재명\*\*

Shim, Jae-Myung

## ABSTRACT

*Work time reduction is one of the pending issues in social debate in Korea, and Schor and Cross' notion of 'time and money' provides an apt framework for analysis on this topic. While increased productivity made possible both increased income and reduction of work time, historically the distribution of productivity gains has been heavily biased toward the former. And behind the win of money over time, according to thinkers like Schor and Cross, is the growth-centered value system and strong consumer culture of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Such an argument signifies that at the core of the debate of work time reduction is the issue of economic growth rather than such issues as quality of life and work sharing. In other words, while the debate of work time reduction in Korea has focused on the latter issues, the real progress in the reduction of work time could be achieved when we are willing to compromise economic growth, as the most important public objective. Work time reduction, however, does not merely mean some quantitative change in a narrow facet of our life but rather fundamental changes in our actions and values and social institution in general. Social debate of work time reduction should include such considerations.*

**핵심용어(Key words) :** 돈과 시간(Time and money),  
근로시간 단축(Work time reduction),  
생산성(Productivity), 소비주의(Consumerism),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일과 여가(Work and leisure)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의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392).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e-mail: jxs653@dongguk.ac.kr

## I. 서론

201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는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표준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도입하였음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그 법정근로시간이 실제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음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길다는 것, 그리고 국내 근로시간단축논쟁의 화두가 삶의 질의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은 시사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접한 이들에게는 낯설지 않다. 다만 근로시간단축이 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의 경우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담론을 찾기 어렵지 않은데 그러한 담론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근로시간단축이라는 논의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삶의 질 개선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소득과 시간에 대한 사회적 선택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는 바로 이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Juliet Schor(1991)와 Gary Cross(1993)의 '생산성과 일과 여가의 배분'에 대한 논지에서 출발하였다. 그것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물질적 풍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화와 그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즉, 기술발달에 의한 생산성의 증가는—그것이 생산기술이든 경영기법이든—물질의 풍요 대신 여가시간의 증가라는 열매를 줄 수도 있었으나 우리가 여가 대신 물질의 부(富)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핵심적 이데올로기인 사회에서,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20세기 중반 세계의 최빈국의 하나에서 세계 12번째 무역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경제 제일과 성장의 가치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깊이 내재화되었는가를 고려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 물질적 생활수준을 제한하고 그 대신 시간의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간의 선택이 사회발전의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낮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Schor와 Cross의 이러한 생산성의 돈으로의 편중된 배당에 대한 지적은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사회가 가지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기초한다.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의 증가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시장경제제도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과 환경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의 관심과 노력을 물질적 부에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지향하는 바를 제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원의 과잉소비를

요구하는 끊임없는 경제성장의 추구는 물리적으로도 지속적(sustainable)인 삶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현대 물질주의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돈과 시간의 테제(time and money thesis)'는 어떤 면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사회의 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Schor와 Cross의 돈과 시간의 테제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돈과 시간의 배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생산성의 돈으로의 편중된 배분'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 대한 관찰이지만,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서구의 선형 산업국이 거쳐 간 발전단계를 압축하여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어쩌면 저자들의 논지가 가장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돈과 시간의 선택에 대한 현상을 실증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한편으로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돈과 시간의 배분에 대한 문제는 이미 그 결과가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본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돈과 시간의 배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이 진정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회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데에 있다. Cross(1993)가 이야기하듯 지금의 물질 중심의 사회가 유일하고 필연적인 역사발전단계가 아니라는 인식, 그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 II. 본 론

### 1. 생산성 증가의 과실(果實): 시간과 돈

Gary Cross(1993)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 '시간과 돈(Time and money)'은 본연구의 주제어로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문구의 의미는 생산성의 증가의 결과로서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뜻한다. 생산성—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로써 측정되는데, 생산성의 증가는 "동일한 양을 보다 적은 시간에 생산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에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경우"의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생산성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 혹은 여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Schor(1991)에 의하면, 1948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생산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국민이 1948년과 같은 물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40년 후에 절반이하만 일하면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하루에 네 시간만 일하더라도—아니면 일 년에 6개월만 일하거나, 혹은 매 2년마다 1년의 유급휴식년을 가지거나—미국인은 1948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말한다.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신 미국인들은 40년 후에도 같은 양의 시간을 일하고 두 배 이상 생산함으로써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의 2009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7년의 7년 사이에 한국에서 노동생산성은 24% 증가하였는데(한국생산성본부, 2009), 이 역시 한국인들이 2007년 현재 2000년 수준보다 24% 일을 덜하고도 2000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아니면 같은 시간을 일하고 2000보다 24%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시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에 따른 보상이 시간보다 '돈'으로써 주어졌음은, 즉 근로시간의 감소보다 일인당 GDP가 증가하였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 생산성 증가의 배분으로서 시간과 돈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생산성이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매우 당연하며 자연스럽다. 반면, 앞의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생산성의 증가가 '돈' 대신 '시간'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성장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에게 사실 매우 생소한 생각이다. 그러나 Schor(1991)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시간'이 '돈'과 마찬가지로 매우 타당하고 적법한, 실현가능한 선택이며, 그러나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슈화의 과정이 없이 '돈'으로의 편중된 배분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성 배분의 원칙이 철저하게 '돈'에 편중되어 있음은 '생산성임금제'라고 하는 것에 잘 나타나있다(이병희, 2008). 생산성임금제는 적절한 임금상승률을 고려함에 있어 생산성증가율을 임금인상율의 준거지표로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병희(2008)는 이것이 임금상승에 관해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가진 노(勞)와 사(使) 모두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생산성 증가의 열매로서 '시간'의 '제외'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 현재 대부분의 경제선진국에서 주40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주40시간을 끝으로 중단된 근로시간단축은 '시간'에 우선한 '돈'의 선택이 전(全)세계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 2. 서구의 근로시간 단축

돈과 시간의 논의에 있어 근로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현대산업사회에서 주40시간 근로시간이 확립된 후 근로자들의 더 이상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19세기의 전반(全般)을 통해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까지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절박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일과 놀이의 경계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던 전통사회의 노동자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주어진 일에 지속적인 집중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매우 이질적이고 동시에 부정적인 경험이었다(박재환·김문겸, 1996; de Grazia, 1962). 당시 산업화에 따라 새로운 생산 공간으로 등장한 공장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전통적 수공업 노동자와 장인, 농민들이 공장 노동자가 되었는데 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요구하는 습관을 주입하는 것은 벌금과 처벌을 비롯한 갖은 통제수단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de Grazia, 1962). 여기에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기계 노동이 노동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순전히 자본과 이익의 원리에 의해 과도하게 늘어난 노동시간은 이 시대의 노동환경을 극도로 열악하고 인간성 파괴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초기산업화시대 전통적 노동인력의 공장노동으로의—누군가 매우 적절하게 표현했듯—'폭력적 흡수'는 어린이와 여성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초기산업화 시기의 노동시간은 주7일, 하루 16시간에까지 연장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 1830년대 아동의 노동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노동시간단축의 첫걸음이었으며, 10시간법, 9시간법 등을 통해 아동, 여성,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880년대부터는 성인 남성 근로자들의 하루 8시간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하루 8시간제도가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Cross, 1990).

20년대 말과 30년대 초의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전반의 경제위기는 근로시간단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근로시간단축이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적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지도계층의 온정주의적, 가부장적(paternalistic) 태도와 여가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진적인 대중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면, 경제공황은 과잉생산에 의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Cross, 1990). 당시 경제공황과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논쟁과 관련해 특기할만한 것이 성숙경제(mature economy)와 생산주의(productivism)의 논쟁이다.

정적인 경제(stationary economy)를 가정하는 성숙경제이론은 주로 노동계가 견지하던 관점으로서, 1920년대 말과 30년대 초의 대공황이 보여주듯 생산수준이 사회가 소비할 수 있는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물질의 욕구를 현재의 생산력으로서 충족시켰으며 잉여 생산력, 즉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이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생산을 줄이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반면 기업계와 사회경제엘리트가 내세운 생산주의는 경제위기를 생산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경제공황의 해결은 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증진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었다. 인간의 욕구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생산의 증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인간의 욕구를 창출하고 소비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업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닌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의 절대적 증대를 통해 해결될 것이었다.

후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논쟁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당시 미국이 택한 것은 케인즈의 '확대경제'로 대표되는 생산주의였으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경제는—과거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와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농업, 원시적인 사냥-채집과 자급자족경제 등을 제외하고—'성장'과 '증가'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Cross(1993)에 의하면 당시 미국사회를 지배한 개념은 이러한 성장주의였으며, 노동계조차도 자국경제의 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성장에 대한 노동계의 애매한 태도는 여기에서 언급할 만하다. 왜냐하면, 근로시간단축의 종언(終焉)은 바로 대중근로계층 자신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Cross(1993)를 인용하면,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 환경에서 자유시간에 대한 정책은 반(反)성장주의로 인식되었다. 과잉생산에 대처하기 위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요구는 경제적 제약, 성장을 제한하는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졌다. ... 반면 돈에 대한 정책은 성장과 물질적 성취를 의미하는 진취적인 관점이었다. 양자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돈과 시간 모두 생산성 향상의 타당한 과실(果實)이라는 주

장은 잊혀져 갔다. (*Within the context of early twentieth century capitalism, the politics of free time could be understood as anti-progressiveness: demanding shorter (work-)hours in order to combat overproduction suggested a goal of economic constraint, a limits-of-growth ideology... By contrast, the politics of money was forward-looking, implying growth and material fulfillment. The fact that both were fruits of productivity with legitimate, if conflicting, claims was obscured.*) (p. 79)

당시 노동계는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임금의 증가와 보다 풍요로운 물질의 소비,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진보라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가 삶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일(paid work)'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자가 '일' 중심의 문화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끝없는 추구라고 한다면, 후자는 마침내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자유시간'이 일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 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일과 여가에 대한 이러한 애매한 태도가 근로시간단축운동을 지배하였으며, 이는 19세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시간의 감소가 주40시간을 끝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끝맺음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1930년대에 대공황에 따른 대량 실업 하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모토로 한 주30시간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경제엘리트와 기업계의 반대, 그리고 노동계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2차 대전의 전시(戰時)경제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가, 이후 성장 이데올로기와 소비주의의 대두 하에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문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후 주40시간 근로시간은 국제표준근로시간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부터 주40시간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많은 유럽의 선진산업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에 들어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더 나아가 1980년대 이후에는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7) 그러한 경우는 소수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에 있어 근로시간단축은 대체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미국은 주40시간 입법에 있어, 유럽은 유급휴가(paid vacation)에 있어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다(Cross,

1990). Cross(1990)에 따르면 2차 대전 전후 유럽은 경제를 부흥할 필요성이 컸으며, 일(日)근로시간(workday) 혹은 주근로시간(workweek)에 비해 유급휴가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용이한 이슈였다. 주근로시간과 유급휴가 모두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지만, 전자가 생산과 성장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경제적, 정치적 이슈로서 인식된 반면, 후자는 복지(welfare)와 관련된 이슈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 3. 국내의 근로시간 단축

국내의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1989~1991년 주46시간, 주44시간 근로제 입법과 2003년 주40시간 입법이 그것이다. 전자는 1987년 6.29 민주화에 따라 열악한 근로환경과 정치적 독재 하에 억눌려있던 노동계의 욕구 분출이 큰 작용을 하였으며(안종태, 1991), 후자는 1997년의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경제위기하에서 근로시간단축이 대량실업과 고용불안정의 해결 방안으로서 인식된 것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박영범, 2003; 김승택·김원식, 2004). 이러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서구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를 보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소득의 제한에 대한 선택과 수용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인식은 부재한 듯 보인다.

어쩌면 국내에서 그러한 인식의 부재는 한국이 후발산업국으로서 처한, 선진 산업국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선행산업국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시간단축운동의 전통이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근로시간단축이 생산성 증가에 따른 대안적 선택일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빈국에서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에 '경제성장'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이념이 되었고, 경제적 수준이 선행산업국만큼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소득과 시간의 배분에 대해 고려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즉 여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치였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이 국가간 경쟁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국가 간의 공조라는 국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Cross, 1990, 1993), 이미 선행산업국가들의 여가보다는 성장이라는 발전모델을 확립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돈과 시간에 대한 논의가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웠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 4. 생산성, 소득, 근로시간 추이분석

다음은 과거의 통계를 이용해 생산성, 소득, 근로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외에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를 같이 보았는데, 미국은 근로시간단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나라이며 또 무엇보다 Schor와 Cross가 제기하고 있는 '돈과 시간'의 논의의 배경이 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프랑스는 현재 주35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이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다른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근로시간단축이 늦게 도입되었고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나라라는 점에 근거하였다.

〈표 1〉 노동생산성 추이(1970~2010)

	1970	1980	1990	2000	2010
미국	26.9 (n.a.)	31.5 (17%)	36.4 (16%)	43.4 (19%)	53.1 (22%)
프랑스	16.9 (n.a.)	25.2 (49%)	33.4 (43%)	40.7 (22%)	44.8 (10%)
일본	1,425.1 (n.a.)	2,164.0 (52%)	3,244.9 (50%)	3,986.8 (23%)	4,616.2 (16%)
한국		3,723.1 (n.a.)	7,622 (105%)	13,082.5 (72%)	19,952.4 (53%)

자료 :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 한국은 1970년 수치 없음. 여기서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GDP, 즉 GDP를 연근로시간으로 나눈 수치. 괄호 안은 변동율.

〈표 2〉 1인당 GDP 추이(1970~2010)

	1970	1980	1990	2000	2010
미국	20,544 (n.a.)	25,453 (24%)	31,827 (25%)	39,509 (24%)	41,976 (6%)
프랑스	17,233 (n.a.)	23,297 (35%)	27,931 (20%)	32,492 (16%)	33,986 (5%)
일본	15,219 (n.a.)	20,913 (37%)	31,156 (49%)	33,942 (9%)	36,225 (7%)
한국	1,873 (n.a.)	3,737 (99%)	8,405 (125%)	14,429 (72%)	20,820 (44%)

자료 :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 Constant US\$ dollar, constant exchange rate. 괄호 안은 변동율.

〈표 3〉 연근로시간 추이(1970~2010)

	1970	1980	1990	2000	2010
미국	1,809 (n.a.)	1,728 (-4%)	1,724 (0%)	1,739 (1%)	1,695 (-3%)
프랑스	1,970 (n.a.)	1,795 (-9%)	1,644 (-8%)	1,523 (-7%)	1,478 (-3%)
일본	2,243 (n.a.)	2,121 (-5%)	2,031 (-4%)	1,821 (-10%)	1,733 (-5%)
한국		2,864 (n.a.)	2,677 (-7%)	2,512 (-6%)	2,193 (-13%)

자료 :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 한국은 1970년 수치 없음. 괄호 안은 변동율.

〈표 4〉 생산성에 대한 1인당 GDP와 근로시간 변동비율 (1970 vs. 2010)

	생산성	1인당 GDP	근로시간	1인당 GDP / 생산성	근로시간 / 생산성
미국	97%	104%	-6%	1.07	-0.06
프랑스	165%	97%	-25%	0.59	-0.15
일본	224%	138%	-23%	0.62	-0.10
한국	436%	457%	-23%	1.05	-0.05

주: 한국의 경우 생산성과 근로시간의 1970년 통계 부재로 1980 vs 2010 변동율임

우선 생산성에 대해 보면,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 물론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 생산성 자체가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과 높은 증가율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6월 발표된 OECD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OECD 상위 50%국가 평균의 45%에 그치고 있다(OECD, 2011). 국내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기업계가 내세우는 주요 반대논리의 하나도 바로 낮은 생산성인데,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은 낮은 생산성을 긴 근로시간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뤄져왔다는 것이다(하상우, 2012)

1인당 GDP에서도 한국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 다른 나라들이 1970년에 비해 2010년 1인당 GDP가 대략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면 한국은 11 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시간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보다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 이 기간 중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근로시간제가 새롭게 채택되었다. 가령 일본은 1987년 주40시간 제도가, 프랑스는 2000년 주35시간 제도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80년대말 주44시간제, 그리고

2004년 주40시간의 단계적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근로시간입법이 <표 3>의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법정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감안하더라도—또 어떤 다른 요인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표 4>는 생산성의 증가와 소득, 근로시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과 2010년의 40년 사이에 생산성과 일인당 GDP 증가율이 각각 97%와 104%로 대략 두 배 상승하였고 근로시간은 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산성의 증가의 대부분이 소득의 증가로 전가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생산성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편중되어 나타나고는 있으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이 소득과 근로시간에 보다 균형있게 배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한국은 다른 두 나라보다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에서 2010년의 3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이 각각 436%와 457%로 거의 비슷한 반면 근로시간의 감소는 5%에 그쳐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대부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 5. 돈의 선택: 소비문화의 승리

이상의 통계는 대체로 이 나라들에서 지난 40년간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여가시간의 증가보다 소득의 증가에 편중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과거 서구의 식자들이 생산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과 여가의 균형있는 발전, 즉 지속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깝게는 60년대의 문헌만 하더라도 20세기 말까지 주3일이나 하루 4~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문구를 찾기 어렵지 않다(예를 들면, Miller & Form, 1964).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예측은 매우 빗나간, 심지어 이상적이고 순진함까지 느껴지는 예측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것처럼 지각된 예측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이 19세기부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또 근로시간단축은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잉생산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일부에 항상 존재하였으므로 지속적 근로시간의 단축은 어떤 면에서 필연적 역사발전과정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발전방향에 대한 빗나간 예측이나 왜 현대사회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논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화두는 소비주의의

(consumerism)이다. 사실 돈과 시간의 논쟁이 시작된 20세기 초반, 미래의 사회가 '일과 소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가령, 물질과 시간의 결핍에서 벗어난 근로계층의 대중문화가 문화의 전반적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사회 엘리트의 문화적 비관론(cultural pessimism)이나 생산 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시간의 증가가 대중의 여가를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휴머니스트적인 관점은 모두 일에서 해방된 인간상에 근거한 것이었다(Cross, 1993). 여가의 고전적 문헌 중 하나인 '게으름에 대한 찬양(In praise of idleness)'에서 Russel(1932)은 과학적 생산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은 자연스러운 역사발전과정이며 인간이 과도한 노동에서 해방되고 나면 늘어난 여가시간을 지적, 심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쓸 것이라고 한 것이 후자의 예라고 한다면, 대중여가를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여가에 대한 대중의 계도를 목적으로 작성된 '여가시간이용에 대한 뉴욕위원회 보고서(1934)'와 같은 가부장적 시도는 전자의 한 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에 기반한 대중여가사회라고 하는, 여지껏 인류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바로 미래사회의 모습일 거라는 예측은 당시 사회적 인식의 큰 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제한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는데, 제한된 욕구(limited needs)의 개념은 인간은 일정 수준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면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비물질적 욕구를 추구하는데 쓰리라는 것을 가정하였다(Cross, 1993). 이는 고전 경제이론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 가령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론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물질의 생산/소비가 제공하는 한계효용/만족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비물질적 부문이 제공하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게 되어 물질적 욕구와 비물질적 욕구의 추구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다(Galbraith, 1998).

이 '제한된 욕구' 혹은 욕구의 포화의 문제는 대량생산체제에 접어든 시장경제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딜레마가 되었다. 대량생산은 필연적으로 대량소비를 필요로 하였는데 생산기술의 발전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대량소비는 오로지 욕구의 지속적 창조에 의해 가능할 것이었다. 그리고 소비욕구의 지속적 창조가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은 광고와 모방심리(social emulation)에 의해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경제주체로서 생산자, 즉 기업은 체질적, 구조적으로 생산 이데올로기, 성장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시간과 돈의 논의에서 생산과 성장은 시간의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돈의 이데올로기이다. 시간과 돈이 양립할 수 없는 사회적

선택이라면, 돈은 항상 유리한 입장에 섰다. 경제의 침체기에 근로자는 돈에 대해 수비적이고 우선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고 생산과 성장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생산은 전통적으로 옳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Galbraith(1971)가 '궁핍의 태도(scarcity mentality)'라고도 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전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항상 물질의 부족을 경험하여 왔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은 사회적 선(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점에서 생산과 성장이라는 기업의 목표는 그것이 바로 사회공공의 가치에 기여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도덕성을 부여받았다(Galbraith, 1971). 그러나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돈의 승리는 생산과 성장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대중은 소비가 제공하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 더 이상 소수가 아닌,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풍요와 소비는 어떠한 민주적 정치 이데올로기보다도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다 (Cross, 2000). Cross가 지적하였듯, 제한된 욕구를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보았던 이들은 끊임없이 욕구를 창조해내는 기업의 능력과 제한 없는 소비와 부유함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자유로움을 과소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진단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Schor(1991)가 바라보는 현대인은 일과 소비의 굴레(the cycle of work and spend)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다. 주어지는 다양한 선택 앞에서 소비자는 소비가 자유로움의 발휘라고 느끼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품의 생산과 그 상품에 대한 욕구의 창조가 모두 생산자의 몫이 되어버렸다면 그 안에서 소비자는 당연히 수동적인 존재이며 그렇게 창조된 욕구는 다분히 회의적이다. 또 그 자유로움의 환상을 위해 끝없이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구속된 존재이다.

Cross(1993)의 진단은 Schor만큼 비판적이지는 않지만, 그에게도 현대의 소비사회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역사상 지금까지처럼 물질이 중요한 가치를 차지한 적이 없었고, 그러한 사회는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학자인 Cross에게 현재의 소비사회는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前)단계일 뿐이다.

## 6. 시간과 돈에 대한 고려: 국내

이상에서 살펴본 돈과 시간의 선택은 서구사회에 대한 관찰이지만 생산성 증가가 가장 많이 돈으로 편중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해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

라고 생각된다. 물론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에 대해 돈과 시간의 선택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돈과 시간의 논의가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선진국을 토양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소득수준이 그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돈과 시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시기상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에서 기술한 소비주의 혹은 소비문화가 현재 한국의 모습과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Schor에 의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비의 동기는 모방(social emulation)인데 이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확대로 모방의 폭이 넓어지고 빈부격차의 확대로 모방의 갭이 커진 것이 그녀가 지적하는 신소비주의(new consumerism)의 양상들이라면(Schor, 1998) 한국사회는 이미 신소비문화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eblen의 유허계급이 소비를 통해 남과 다르게 보이고자 했다면, Schor의 현대 대중은 소비를 통해 남과 같아지고자 하는, 뒤처지지 않고자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모습이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면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으리라 보인다.

Galbraith(1998)에 의하면 그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광고이다. 광고는 풍요의 사회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질이 희소한 곳에서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절박한 곳에서는 그것의 소비를 위해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광고는 그 상품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때 혹은 욕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하다. 광고는 직접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며,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은 사회가 그 정도의 비효율성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서 봤을 때 한국은 이미 부유한 사회이다. '2011 광고산업통계'의 하면 한국은 2010년 광고매출규모가 10조3천억을 넘어섰으며, 다른 보도에서는 주요매체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광고비지출이 2010년 11조를 넘어 GDP의 1% 수준을 넘었고 이는 다른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이다(한국경제, 2011/7/26). 한국이 소비사회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시간을 생산성 증가에 대한 대안적인 보상으로 고려하는 돈과 시간의 논의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논의인가라는 질문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이슈의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관련 있는 질문인 것만은 틀림없다.

### III. 결 론

돈과 시간의 문제는 일과 여가의 문제이다. 생산성의 증가라는 사회적 성취에 대해 그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보상으로 물질의 풍요와 시간의 풍요가 있는데, 전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일을 줄이지 않고 소득을 늘리는 것을,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일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왔는가는 누구라도 쉽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가장 긴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심심찮게 사회적 공론의 주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단축은, 들리는 말은 많은 그러나 내용은 거의 다르지 않은 주제인 듯하다. 근로시간의 논의에 있어 Schor와 Cross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논쟁에 대해 우리사회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아니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차마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근로시간단축은 본질적으로 삶의 질이나 일자리 나누기의 문제가 아니며<sup>1)</sup> 그 핵심은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라는 점,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가치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이 본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라는 점은 바로 근로시간단축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포기 혹은 희생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생산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고—경제성장은 한 지역이 일정기간 생산한 생산량(GDP)이 전(前)기간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가를 의미하므로—생산을 극대화 한다는 것은 바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즉 근로시간을 가능한 길게 해야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단축논의가 진정으로 다루어야 할 화두는 우리가 수십 년간—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사회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온 경제성장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인가라는 질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의 논의가 삶의 질이나 일자리나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근로시간단축의 본질을 외면한 피상적인 논의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어온 사회 최고의 가치가 경제성장이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의식주를 위한 물질마저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

1) 하지만 강수돌(2011)과 같은 이에 의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에게 '삶의 질'의 개선은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서 지금 이만큼의 경제수준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경제성장 혹은 경제활성화의 모토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이고, 또 소위 성장이나 분배나 하는 논의도 그 찬반에 대한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주제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마치 성역과도 같은 경제성장이라는 가치에 대한 대안의 가치가 존재하며, 또 끊임없는 경제성장이 결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모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대안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일부 유럽 국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예로 들고자 한다. 즉, 이들 나라의 근로시간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가령 프랑스의 35시간 근로제는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나 과도한 사회복지의 폐해로서 비추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주35시간제도가 경제성장과 소득만이 사회발전의 유일하고 최선의 방향이 아니라는 그들의 적극적인 인식의 반영이며 물질의 풍요보다 여가시간을 통한 균형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의 짧은 근로시간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만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환경에 대한 인식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사회가 아직 따라가기 힘든—어쩌면 이해조차 못하는—앞선 인식인 것이다.

다음, 끝없는 경제성장이 지속적 사회발전모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방금 언급된 환경에 대한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 현 시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환경이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로 정의되는 경제성장을 배제한 채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시도에 그치기 쉽다. 지금까지 환경문제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효율성(efficiency)의 개선에 의존한 것이었다(Hayden, 1999). 즉 기술 발전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환경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역사적 관찰 결과는 자원의 단위이용의 감소가 생산/소비수준의 증가로 인해 요구되는 자원 총량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며, 기술의 발전이 자원의 단위이용량을 무한정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경제성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어느 정도의 물질적 수준이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수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절제된 만족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Hayden, 1999).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돈과 시간의 선택, 즉 근로시간단축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여가사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단순히 더 많은 이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여가를 위한 지출이 늘고 여가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사회가 아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 점이다. 즉 근로시간단축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 생활의 한 측면에 일어나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데에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여가사회는 일과 소비가 중심 되는 시장(市場)의존일변도의 삶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선택과 가치가 존재하는 사회이며 그를 통해 현대사회가 지닌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근로시간단축의 논의에는 이러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대안사회에서의 여가는 질적으로도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다. 현대의 여가를 가리켜 흔히 수동적이고 소비적 여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일과 소비의 굴레에 갇힌 현대인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끊임없이 일과 소비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여가의 역할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재창조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라면, 여가가 일(work)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소비적<sup>2)</sup>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가는 일과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가는 일의 부속물이다. 또 1960~70년대 사회학에서 관심을 가졌던 일이 여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일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태도가 여가에 파급됨을 보여주고 있다. 타율적이고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일을 장시간 하는 이에게서 적극적, 자율적, 창의적인 여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자유시간의 증가는 개인의 여가의 형태와 의미에도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시간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여가가 삶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혹은 삶에서 일이 주는—혹은 일이 주지 못하는—의미와 목적을 여가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가 본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환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만약 그러한 이해가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한다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보다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극복한 근로시간단축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사회적 결정이 갈등과 상이한 이해관계를 동반한다고 한다면 근로시간단축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경제성장이 과거 수십

2) 국내에서도 여가를 소비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을 찾기 어렵지 않다(예를 들면, 박낙중·한범수, 2009; 박상곤·박석희, 2006; 조광익, 2006, 2007; 한교남·한범수, 2012).

년간 우리사회의 지고의 가치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은 돈이 아닌 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대안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수돌(2011). 장시간 노동 체제. 문제의 뿌리와 극복의 전망 『노동사회』, 7·8월, 14-33.
- 김승택·김원식(2004). 『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안종태(1991). 『노동시간 단축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부설 노동경제연구소.
- 이병희(2008). 『통계로 본 노동 20년』. 한국노동연구원.
- 박낙중·한범수(2009). 문화공간의 소비와 의미에 대한 담론. 『관광학연구』, 33(4), 145-168.
- 박상곤·박석희(2006). 문화자본이 여가소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0(6), 241-258.
- 박영범(2003). 『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집문당.
- 박재환·김문겸(1996).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광익(2006). 여가 소비 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자본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0(1), 379-401.
- 조광익(2007). 현대사회에서의 여가의 의미에 대한 문화산업론적 고찰. 『관광학연구』, 31(5), 393-417.
- 하상우(201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월간노동리뷰』, 3월호, 27-37.
- 한교남·한범수(2012). 한국사회의 사회계층 간 여가소비의 구별: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10), 181-199.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7).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 한국생산성본부(2009). 『생산성 국제비교 2009』.
- Cross, G.(1990). *A social history of leisure: since 1600*. State College, PA: Venture.
- Cross, G.(1993). *Time and money: the making of consumer culture*. London: Routledge.
- Cross, G.(2000). *All Consuming Century: Why Commercialism Won in Moder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 Grazia, S.(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 Galbraith, J. K.(1998). *The Affluent Society* (40th anniversary ed.). Boston: Mariner Books.
- Galbraith, J. K.(1971). *The New Industrial State* (2nd ed.).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Hayden, A.(1999). *Sharing the work, sparing the planet: work time, consumption, & ecology*. Sydney: Pluto Press.
- Miller, D. C., & Form, W. H.(1964). *Industrial Sociolog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 New York Committee of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1934). *The Report of the New York Committee on the Use of Leisure Time*.
- OECD(2011).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 Russell, B.(1932). In praise of idleness, In Larrabee, E. & R. Meyersohn (Eds.) *Mass Leisure*, 96-105.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 Schor, J. B.(1991).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 Schor, J. B.(1998). *The Overspent American: Upscaling, Downsizing, and the New Consumers*. New York: Basic Books.

2012년 6월 18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2년 7월 23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2년 7월 27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룩